

南北韓經濟의 相克性과 相補性 研究*

李 泰 旭 · 李 相 禹

- I. 序 言
- II. 南北韓 經濟體制 및 經濟力比較
- III. 南北韓 經濟構造의 比較分析
- IV. 南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可能性 分析
- V. 經濟交流 展開戰略

I. 序 言

80년대 이후 한국은 냉전시대의 논리에 따른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과 적대감 유발 보다는 포용자세로 적극적인 對北政策을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 및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상호접촉 및 교류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전환을 국내외의 정치적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과거와 같은 정치 일변도의 남북한 관계는 이미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의식을 기초로 특히 한국정부는 남북한간의 경제회담을 계의하면서 경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 제의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차원을 벗어난 남북통일 과업달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다. 왜냐하면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언젠가는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협상 및 타협 이전 단계로서 비정치적인 교류, 특히 경제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사상과 이념의 차이와 장기간 분단에서 오는 이질화를 더 심화시키지 않고 이를 극복하여 동질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 추진 노력

* 本研究는 학술진흥재단 학술지원비 지원(1987)으로 이루어진 것임.

에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같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사회의 폐쇄성, 정보획득의 난점, 사회주의 경제체제 일반에 대한 연구 미진 등으로 남북한 경제의 비교 분석이 활발하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소나마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 추진 사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아래 남북한 경제구조 분석과 그 분석에 따른 상호경제의 구조상의 경쟁성 및 보완성 문제와 경제교류 및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먼저 남북한 경제체제 및 경제력을 간략히 비교한다. 둘째는 남북한 경제구조의 상극성과 상보성을 찾은 다음 이를 토대로 세계로는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 가능성의 문제를 다룬 다음 경제교류의 전개 전략에 대하여 정책적인 방침을 제시한다.

남북한의 경제교류 및 협력이란 것을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에서만 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東西獨 및 台灣·中共과 같은 분단국가의 사례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제구조 분석과 이에 따른 교류 가능성 분석에 있어서는 경제적 요인에 따른 경제원칙을 적용하여 집중 분석한다. 다만 결론 부문에서 정치 및 경제의 상호 의존성 문제를 간단히 언급한다.

경제구조 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일관된 북한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주로 수집 가능했던 단편적이며 또는 2차적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제한적인 성격이 있음을 밝혀 둔다.

II. 南北韓 經濟體制 및 經濟力 比較

경제체제는 전통적으로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시장체제, 사유재산권, 경제적 유인체제, 자유경쟁, 개방경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이며,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의 중앙

집권화, 관료체제, 집단소유권, 명령체제, 비경쟁, 자급자족 경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이다. 그런데, 남북한은 한반도 가 분단된 이후 오늘날까지 다른 이데올로기에 근거를 둔 상이한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교류는 거의 全無한 상태에서 40여년간 서로 경쟁적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 아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인 개방경제로 발전하여 왔는데 반하여, 북한은 막스-레닌 공산주의 정치이념 아래 생산수단의 國公有權을 본질로 하는 사회주의 명령경제 체제로서 대내지향적인 폐쇄된 경제로 발전하여 왔다.

한반도가 분단된 직후의 남북한 경제구조는 南農北工으로서, 주요 지하 자원 및 공업시설은 북한지역에 있었으며, 남한지역은 약간의 경공업 시설에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50년대의 한국을 보면 빈곤의 악순환 과정을 겪고 있었다. 한국은 한국동란 이전에도 북한보다 높은 인구밀도를 가졌지만, 전쟁중 피난민이 남한지역으로 대거 유입함에 따라 인구는 과밀하여졌는데 경제는 농업 위주의 낙후된 상태에 있었다. 해외로부터, 특히 미국 원조에 의하여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발전을 하여 왔으며 경제성장률은 겨우 2~5%에 불과한데 비하여 인구성장률은 약 2.8%로 1인당 국민소득 성장은 보잘것 없어 겨우 60~8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는 정부주도에 의한 적극적인 공업화 정책에 의하여 산업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신흥공업국으로 급속히 탈바꿈을 하여 왔다 즉 1962년부터 시작하여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경제성장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출주도에 의한 개발전략을 꾀하였으며, 그 이후 1981년부터 시작하는 제 5차 계획에서는 성장우선에서 경제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안정우선 정책으로 전환을 가져왔다. 이같은 정책 전환에 따라 官主導型 開發政策에서 民間主導型 市場體制로 점진적 이행

을 하여 왔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안정을 추구하되 여전히 對外指向의 인 개발전략을 고수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업화는 소비재 수입대체에서 노동집약적 소비재 수출 증대,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 대체 및 수출, 그리고 기술집약 및 정보산업 개발의 과정을 거쳐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1차산업에서 2차 및 서어비스산업으로 비중이 커져 왔으며, 특히 경공업 부문을 다양화시킨 다음 중공업과 그리고 첨단기술 산업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의 결과 경제력도 크게 확대되어 1987년 현재는 국민총생산은 1,200 억불, 개인당 소득은 2,800 불, 그리고 수출입 총액 또한 800 억불을 훨씬 초과하는 경제규모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에 反하여 북한은 50년대까지 사회주의 경제기초를 확립하면서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생산수단을 國公有化하였다. 50년대까지는 공산권 국가와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져 경제발전을 목표로한 대로 이룩하여 개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것보다 상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북한은 소련 및 중공으로부터 경제기술 원조의 일시적 중단에 따른 투자 자원 부족과 기술도입 부진 및 노동력 부족에다 많은 자원을 군사력 강화에 이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이 70년대 들어와서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61년 부터 시작된 7개년 계획을 3개년 연장하고도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다음 71년 부터 시작한 6개년 계획의 초기에는 西方圈으로부터 적극적 자본도입을 추진하여 다소 계획 목표에 성공적이었으나 후반에 들어서 외채 지불의 연기사태로 서방으로부터 협력을 계속 받지 못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리하여 다음 계획을 위하여 2개년 완충기를 두기까지 하였다. 그 이후에도 북한 경제는 계속 경제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70년대 이후 부터 오늘날까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점점 더 커져서 한국이 북한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을 <표 1>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은 70년대 초반에 개인당 국민소득에서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표 1>을 보면 1986년 현재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173 억불, 개인당 소득은 860

<表 1>

南北韓 주요 경제지표

(1986 말 현재)

구 분	단 위	韓 國	北 韓	남북대비
인 구	만 명	4,157	2,061	2.1 : 1
경제 활동 인구	"	1,612	861	1.9 : 1
면 적	천 km ²	99.4	122.1	1 : 1.2
G N P	억 달 러	951.2	173.5	5.5 : 1
1인 당 GNP	달 러	2,296	860	2.7 : 1
경제 성장률	실 질 %	12.5	2.1	
재정 규모	억 달 러	156.5	127.3	1.2 : 1
재정부담률	%	16.5	73.4	
군사비지출	억 달 러	48.9	39.3	1.2 : 1
군사비/GNP	%	5.1	22.7	
1인당 군사비	달 러	118	195	1 : 1.7
무역 고수출	억 달 러	662.9	36.0	18.4 : 1
수출	"	347.1	14.9	23.3 : 1
수입	"	315.8	21.1	15.0 : 1
무역의존도	%	69.7	20.7	
에너지공급총량	. TOE	6,100	2,887	2.1 : 1
발전 설비 용량	만 kW	1,806	611	3.0 : 1
석탄생산량	만 ㄲ	2,425	3,750	1 : 1.5
정유생산능력	만 bl/일	79.2	7	11.3 : 1
강철생산능력	만 ㄲ	1,584	430	3.7 : 1
시멘트생산능력	"	2,986	904	3.3 : 1
자동차생산능력	만 대	65	2	32.5 : 1
조선능력	만 G/T	300	21	14.3 : 1
TV 생산능력	만 대	1,248	24	52 : 1
직물생산능력	억 m	60	6	10 : 1
식량작물생산량	만 ㄲ	677	483	1.4 : 1
(쌀생산량)	"	(561)	(201)	28 : 1
수산물 생산량	"	366	237	1.5 : 1
도로총연장	km	53,654	22,000	2.4 : 1
(고속도로)	"	(1,415)	(240)	5.9 : 1
철도총연장	"	6,324	4,549	1.4 : 1
(전철구간)	"	(1,079)	(2,788)	1 : 2.6
자국선 적취율	%	44.7	20	

자료 : 국토통일원

불로 한국의 약 1/3 수준을 조금 넘으며 수출입 총액은 겨우 36억불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북한경제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북한 경제체제와 그동안 취하여 온 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먼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을 말하면, 그것은 경제구성원들의 행위 및 상호교류를 조정함에 있어서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방법을 취한다. 행정적 강제와 법적 규제를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하고 따라서 관료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적 이익이란 동기에 의하여 판매자와 구매자로서 수평적 관계를 갖는 시장경제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달리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격기구에 의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행위가 조정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는 화폐, 가격 그리고 이윤이란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반해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뜻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개혁이라고 할 때는 사실상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운영방식을 점진적으로 탈피하여 수평적인 시장 역할을 도입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개혁은 바로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

북한은 경제개혁을 위한 여러조치, 예를 들어서,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상설 자유시장의 일부 허용, 공장기업소 경영에 부분적 독자성 인정, 물질적 유인제 실시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아직까지 미봉책으로서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북한경제는 여전히 수직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획을 중앙계획위원회인 「國家計劃委員會」에서 작성하여 최고정치집단인 黨中央委員會와 最高人民委員會에서 승인을 받아 國家法으로 확정된다. 모든 계획사항은 상부로부터 하부조직으로 하달되는데, 최하위에 있는 공장기업체 또는 집단농장은 물량단위로 표시된 생산목표, 자원투입량, 투자재원, 비용, 새로운 기술 활용등 모든 세부적인 지시를 받는다. 이런 점에서 명

1) 國土統一院, “북한의 社會變化 徵候動向”, 1985. 9., pp. 15~16.

령경제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직성(rigidity)이다. 한번 계획된 것은 수정하기 힘들다. 계획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기관과 계통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여건 변화에 따른 適期에의 수정은 힘든 것이다. 그리고 최고계획당국은 긴장된 계획목표(taut planning)를 추구하여 주어진 자원으로 부터 최대의 산출물을 얻어내겠다는 動員效果(mobilizing effect)를 가질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의 경직성을 유발한다.²⁾

북한이 선택한 고전형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政經一致를 주장하는 전형적 독재 모델로서 경제적 合理性보다는 政治的 合目性, 그리고 테크노크라트의 실용성과 전문성보다 黨性과 革命性을 더욱 강조하는 체제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를 수단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일찌기 유고, 헝가리 등 東歐에서 최근에는 中共과 蘇聯에서 개방과 함께 경제개혁을 추진중이다. 즉 시장적 요인을 도입하여 생산활동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미온적인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의 북한경제를 있게 한 또하나의 요인은 고전적 사회주의가 내세운 「一國社會主義」라는 스탈린 방식에 따른 자급자족 경제체제(autarky)를 추구한 정책이다. 자급자족 경제를 주장한 이유는 자본주의 毒素의 침투를 막고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경제 위기로 부터 사회주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경제 질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중공도 마찬가지였음)에서는 이것을 自力更生原則으로 表現하며 이 원칙을 경제 기본노선으로 채택함으로써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고수하여 왔다. 이 路線은 북한의 유일 지도이념인 「主體思想」에서 「經濟에서 自立」으로 나타나고 있다.

自立經濟란 自給自足 經濟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自給體制 구축이 바로 자립경제 건설이라고 이해하여 對外去來는 경제계

2) H. Hunter, "Optimal tautness in Developmental planning",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uly 1961, 9(2) pp. 561~572.

회에서 需給의 차질을 메꾸는 보조적 역할만 하는 것이고 가급적 국내자원을 이용하고 국내시장의 성장에만 주력하였다. 이같은 폐쇄적인 경제정책은 특히 남북한과 같은 小國經濟(small economy)의 개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³⁾ 小國經濟는 대외경제교류 및 협력을 통해서 국제분업의 이익을 누린다는 점 이외에도 세계시장에 수출로 협소한 국내시장을 극복하고 다국적 기업을 통한 해외자본 도입, 기술이전, 시장개발, 연구·개발 집약 산업에의 투자등으로 경제성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폐쇄적인 북한 경제는 필요한 자본 및 기술도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전산업 부문에 걸쳐 기술수준 낙후와 산업시설의 노후화(老朽化)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도 自力更生原則에 의한 대내지향적인 경제발전에 한계성을 인정하고 70년대 이후 경제개방화에도 점차 정책 전환을 해 왔으며 80년대부터는 서방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외국자본과 합작투자가 가능한 「合營法」까지 제정하고 수출 확대책을 적극 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또한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구하였다. 「一國社會主義論」과 「主體思想」에 입각한 自立經濟 建設과 「國放에서 自衛」를 위한 군사산업 육성을 위하여 취하여 온 중공업 우선 정책은 북한 경제에 산업 불균형이란 문제점을 가져왔다. 이것은 곧 북한이 후진경제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성장모형에 따르지 않음으로서 산업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둔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공업 우선 정책의 결과 소비재 산업과 농업부문의 발전이 지연되고, 특히 투자재원 부족과 함께 비생산적 투자라고 간주하는 사회간접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체적인 산업간의 유기적 관계 미흡과 불균형으로 발전을 둔화시켰다.

중공업을 발전시키자면 우선 수입 대체와 수출증진 기간을 통하여 농업 부문에 발전기반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을 다양

3) Lawrence B. Krause, "Major Policy Issues for Small Open Economy", 國際經濟研究院(現: 産業研究院) Seminar Series ss-77-5, August 1977, p. 53.

하게 발전시켜 생산적 기반을 마련한 다음, 수출시장 정보, 새로운 기술 도입, 시장개발 등 대외협력 관계를 이루어야만 중공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內需市場의 협소, 기술낙후, 자원부족 등으로 성공할 수 없다. 사실 남북한은 日帝 植民地 經濟로 부터 해방된 이후 경제발전 초기에 있어서 人的·物的 특히 기술수준면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준비상태에 있지 아니했다. 그런데 북한이 小國 經濟이면서 동시에 여건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소극적인 對外去來 政策을 추구하면서 규모의 경쟁성을 필요로 하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개발정책이었다.

마지막으로 북한경제 발전양식에 있어서 주요 外延的 成長(extensive growth) 방식을 취하였다는 점이다. 모든 사회주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실제로 1960년대까지 이 방식을 중시한 것은 사실이다. 古典的 社會主義의 한 특징이 政治的 合目性을 내세워 黨性과 革命性을 강조하면서 의욕적인 생산요소의 양적 동원을 통해서 산출물의 생산증대를 가져올려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內包的 成長(intensive growth)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일찌기 경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중공의 덩소평이 주장하는 「實事求是」나 蘇聯의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는 「페레스트로이카」 모두가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개방없는 개혁이 있을 수 없다. 폐쇄경제정책 자체가 새로운 자본과 기술도입에 큰 제약이며 外延的 成長의 길밖에 있을 수 없다

북한에서도 70년대 이후 부터 현재까지 경제성장에 점진적 둔화 현상을 인정하여 과거의 動員의이던 계획목표를 실현성을 감안하여 하향조정하면서 기술개혁과 현대화등으로 외연적 성장에서 내연적 성장으로 이행을 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合理的 經濟운용보다는 정치 사상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제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의 과업목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

Ⅲ. 南北韓 經濟構造의 比較分析

1. 南北韓의 產業構造

남북한의 산업구조와 그 실태를 비교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뒷따른다. 북한 자료의 빈곤뿐만 아니라 용어개념상의 차이 때문에 심층적 분석을 크게 제약한다.

우선 남북한의 산업구조로 산업별 국민총생산과 인구의 구성비를 비교하면 <表 2>와 같다. 表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는 농업(임업·수산업 포함)의 비중이 50년대에는 절반에 가깝던 것이 85년에는 겨우 14% 수준에 불과하며 취업구성을 보아도 25% 수준이다. 反面에 광공업 부문은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높여서 56년대에는 12%이던 것이 현재는 30%를 넘는다. 그러나 한국통계에는 공업분야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건설업」

<表 2> 南北韓의 산업구조 비교

(단위 : %)

	한				국				북				한	
	농림수산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농업		공업		기타생산물		비생산물()	
	인구	GNP	인구	GNP	인구	GNP	인구	GNP	인구	GNP	인구	GNP		
1956		47.2		12.5		40.3		26.1		40.1		33.8		
1960		36.8		15.7		47.5	57.6	28.9	21.8	41.3	10.5	29.8	10.1	
1965	58.6	38.4	10.4	19.8	31.0	41.8	56.3	24.4	21.1	51.5	10.5	24.1	12.1	
1970	50.4	28.0	14.4	22.8	35.2	49.2	51.3	21.5	24.3	57.3	10.5	21.2	13.9	
1975	45.9	25.4	19.1	29.7	35.0	44.9								
1980	34.0	14.4	22.6	30.2	43.4	55.4								
1985	24.9	13.9	24.4	30.7	50.6	55.3								

자료 : 한국, 경제기획원, 「主要經濟指標」 各年號

북한, 국토통일원, 「南北韓 總力趨勢比較」, 1980, 1986.

4) 國土統一院, “第2次 7個年計劃總和 및 第3次 7個年計劃分析”, 1987.4.

〈表 3〉

한국의 중화학공업비율

(경상가격 생산액기준, 단위: %)

	1962	1966	1971	1976	1981	1985
중화학공업	26.8	32.5	38.2	49.0	52.6	55.4
경 공 업	73.2	67.5	61.8	51.0	47.4	44.6

자료: 경제기획원, 「主要經濟指標」, 1986.

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까지 합하면 GNP 구성비로 50%를 훨씬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工業構造도 고도화 되었는데 〈表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2년에 73.2%로서 경공업이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였으나 1985년에는 44.6%로 저하되면서 대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26.8%에서 55.4%로 높아진 것이다. 이것은 지표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전통적인 농업중심의 전근대적 산업구조에서 공업중심의 근대적 산업구조로 이행되었으며, 공업구조도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화되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북한의 경제를 〈表 2〉에서 보면 최근 자료는 없지만 산업구조에서 남한과 같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부문과 기타 생산부문이 다소 비중에 있어서 감소한데 비해 공업부문은 증가하였다. 농업부문에서 취업인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70년대의 한국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구조를 7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광공업 건설과 사회간접자본을 합하면 농업, 공업 구조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질적인 내용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북한의 공업투자 비중을 경제계획 기간별로 보면 전후복구 3개년 계획(1954~56)에서는 49.6%, 제 1차 5개년계획(1957~60)에서는 51.3%, 7개년계획(1961~70)에는 60%, 그리고 6개년계획(71~76)에서는 49%에 달한다. 그런데 중공업과 경공업 사이의 상대적 비율은 1954~56년에는 81.1% 對 18.9%, 1957~60년에는 82.6% 對

17.4%, 1971~76년에는 83% 17%로 중공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이 결과 部門間的 불균형은 확대만 되어 왔다.

북한의 산업 불균형을 계획당국의 政策意志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계획당국이 산업간 균형인가 또는 불균형인가를 판단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의 계획과 정책을 유지시키려는 意志의 강도에 따라서 불균형의 해석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 제 1차 7개년 계획 기간 동안 경공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그 성과가 중공업부문보다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경공업을 중공업 발전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도 중공업 부문의 상대적 확대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제 2차 7개년 계획기간(1978~84) 역시 연평균 9.6% 성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동기간 중 투자의 배분은 생산적 건설에 80%, 비생산적 건설에 20%를 투자할 것을 계획하는⁵⁾ 가운데 6개년 계획기간 중의 부진했던 부문인 동력, 원자재 개발 및 수송 부문에 정책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산업구조의 불균형 심화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실패를 끝나고 말았다.

이와같이 북한이 중공업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분야에서까지 오히려 한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이 소비재→중간재→자본재→지식·정보산업으로 이행하여 온데 反하여 북한은 중공업→경공업·농업으로 이행하여 온 결과이다.

2. 南北韓의 貿易構造

남북한의 무역구조를 보기 전에 우선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절대규모에 큰 차이가 있을 뿐아니라, 한국무역은 비교적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는 극히 불규칙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그리고

5) 로동신문, 1977.12.7일자

한국의 무역수지의 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1986년에는 완전히 흑자로 전환하였는데, 북한은 적자폭의 감소가 1970년대 이래 계속 되다가 1985년부터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表 4〉에서 알 수 있다.

한국은 국내자본의 부족을 외자로 충당하고 협소한 국내시장을 해외시장으로 보완하기 위한 對外指向의 開發戰略의 결과 무역규모가 크게 성장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自力更生原則 아래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대외거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무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무역은 부등가 교환에 의한 착취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호상성의 원칙에 의해 서로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진행되며 자립적 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 이바지 한다. 즉 사회주의 무역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사용가치의 교환이 위주로 되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무역에 대한 개념은 사회주의 국

〈表 4〉

南北韓의 貿易規模趨勢

(단위 : 억불)

구분 년도	한				북			
	수출액	수입액	총액	수지	수출액	수입액	총액	수지
1970	8.4	19.8	28.2	-11.4	3.7	4.4	8.1	-0.7
1975	50.8	72.7	123.5	-21.9	8.1	10.9	19.0	-2.8
1980	175.0	222.9	397.9	-47.9	14.4	17.4	31.8	-3.0
1981	212.5	261.3	473.8	-48.8	13.0	16.0	29.0	-3.0
1982	218.5	242.5	461.0	-24.0	15.0	18.0	33.0	-3.0
1983	244.4	261.9	506.3	-17.5	13.8	15.5	29.3	-1.7
1984	292.4	306.3	598.7	-13.9	13.4	13.9	27.3	-0.5
1985	302.8	311.4	614.2	-8.6	13.5	17.2	30.7	-3.7
1986	347.1	315.8	662.9	31.3	14.9	21.2	36.0	-6.2

자료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7. 국토통일원

가에서 갖는 무역의 기본 성격에 북한의 自力更生原則이 결부되어 독특한 형태로 발달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은 국민경제에 대한 보조적 부문으로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기여하고 그 기초 위에 발전하여야 한다는 소극적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북한의 대외무역의 본질은 무역이 생산부문인 對內經濟에 대해 종속적 지위에 있다. 수입을 우선으로 하여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또는 계획의 실패로 인한 단기적 수급불균형을 보완하는데, 수출은 그 전제가 되는 수입에 필요한 외화자금의 원천을 획득하려는 부수적 의미만 갖는다.

이같은 對外去來에 대한 정책차이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해외의존도를 보면 <表 5>에서와 같다. 한국의 경우는 갈수록 의존도가 심화되어 왔는데 비하여 북한은 대체로 2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5>

南北韓의 貿易依存度

(단위 : %)

	1977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한국	56.8	66.0	71.4	66.5	66.6	72.5	73.3	69.8
북한	17.7	25.2	20.8	23.7	19.6	18.6	—	20.7

자료 : <表 4>와 同一

다음으로 남북한 무역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지극히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남북분단과 대치의 미묘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사회주의 세계와 교역에 적극성을 띄고 있으며 북한 또한 서방세계의 무역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國別貿易構造에서 정치적인 특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통적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지역적 편중도이다. <表 6>과 <表 7>에 의하면 한국은 美國과 日本, 북한은 [蘇聯, 中共, 日本에 지극히 높은 무역집중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집중현상이 75년대 보

6) 경제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9.9.

<表 6>

北韓의 地域別 貿易構造

(단위 : %)

년도	구분	공산권전역	소련	중공	자유권전역	일본
1970		83.6	50.3	15.5	16.4	7.7
1975		58.5	22.7	23.4	41.5	11.9
1980		58.1	26.4	20.3	42.0	16.6
1981		60.0	28.7	20.4	40.0	16.5
1982		65.5	32.6	20.6	34.5	16.3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86.

<表 7>

韓國의 地域別 貿易構造

(단위 : %)

년도	구분	미 국		일 본		기 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70		47.3	29.5	28.1	40.8	24.6	29.7
1975		30.2	25.9	25.4	33.5	44.4	40.6
1980		26.3	21.9	17.4	26.3	56.3	51.8
1985		35.5	20.8	15.0	24.5	49.5	64.2
1986		40.0	20.7	15.6	34.4	44.4	44.9

자료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7.

다 최근에는 개선되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각자 무역의 절반 이상이上記 나라들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북한의 경우를 보면 75년도 이후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감소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70년대 들어서 對內指向的 工業化의 한계를 인식하고 무역정책에 전환이 있었던 이후이며 특히 대서방교역(특히 일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결과이다.

남북한의 商品別 輸出入 구조를 비교분석하는데는 북한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하여 한국의 경우는 全世界 그리고 북한은 OECD와의 교역자료를 SITC 大分類에 의한 무역구조를 <表 8>에 표시하였다.

<表 8>에 의하면 한국은 경공업 제품(SITC 6, 8)이 수출의 절반 이상을

〈表 8〉

南北韓의 輸出入 構造

(단위 : %)

구 분 SITC 분류	수 출				수 입			
	한 국		북 한		한 국		북 한	
	1981	1984	1981	1984	1981	1984	1981	1984
식료품 및 산동물 (0)	6	4	21	27	10	5	16	1
음료 및 연초 (1)	0	0	0	0	0	0	0	0
비식용원료 (2) (광물성 연료 제외)	1	1	26	21	14	13	1	7
광물성 연료, 운활유 및 동 유사품 (3)	1	3	5	2	30	24	2	2
동물성 유지 (4)	0	0	0	0	0	0	0	6
화학제품 (5)	3	3	0	2	8	9	10	9
원료별 제품 (6)	34	25	41	40	11	12	29	22
기계류 및 운반용기 (7) 기	23	35	1	4	23	32	37	43
잡제품 (8)	31	28	1	1	3	4	5	9

자료 : 한국, 「주요경제지표」, 경제기획원, 1987.

북한,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1981 & 1984 series, paris.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소비재(SITC 8)가 또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류(SITC 7)가 20~30%로서 이 세분야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현상은 바로 한국의 工産品이 수출의 주종을 이루어 오면서 농수산물 및 광산물의 수출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결과이다. 수입은 기계류와 천연자원(SITC 0.2,3)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⁷⁾

북한은 40%의 수출이 원료가공제품(SITC 6)이며 그리고 식료품(SITC 0)과 천연자원(SITC 2)이 다음으로 주요 수출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입은 한국처럼 기계류의 수입이 전체의 40%정도이며 다음으로 원료가공품과 소비재(SITC 6,8)를 합하여 약 30%정도 그리고 화학제품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사실 공산권과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60%를 차지하므로 OECD

7) 이 분석의 통계자료는 연하청(1986),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pp.201~205.

와의 교역만으로 수출입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對共產圈 무역중 거의 90%를 차지하는 中蘇와의 교역구조를 살펴보아도 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1972년부터 1984년 사이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소련에 대해 一次產品의 수출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천연자원, 농산물이 바로 그것이다. 수입에서는 기계설비 및 수송기기, 그리고 석유관련 산업제품이 절반 이상이다. 한편 중공과의 무역에서는 소련과 달리 원료가공제품과 비식용원료, 천연자원 수출이 주종이다. 최근에 와서 식용산동물(SITC 0) 수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수입은 천연자원 (특히 석유)에 70~80% 집중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북한은 工產品 특히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一次產品과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Ⅳ. 南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 可能性 分析

1. 南北韓 商品交易

남북한의 산업구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다양화된 경공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70년대 이후 중공업 분야도 급속한 발전을 하여 현재는 구성비가 경공업을 능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처음부터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소비재 부문의 경공업에의 투자는 소홀히 해왔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의 중·경공업 구성비로 본 구조는 최근에 비슷한 양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인 내용과 그 규모를 보면 한국은 소비재를 중심으로한 경공업 분야가 크게 발전되어 왔는데 反해서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두 경제는 격차가 심할뿐 아니라 다소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한 두 경제의 경쟁적 또는 보완적 관계를 산업구조 면에서 가 아니라, SITC大分類에 의한 무역구조 측면에서 볼 때는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다소 보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소비재, 기계

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데 북한은 천연자원 수출이 대부분이므로 경쟁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수입구조에서는 양측 모두 원유와 기계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으므로 무어라 말하기 힘들다. 그래서 무역구조를 좀 더 細分된 품목으로 세밀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만일 양측이 산업구조면에서 水平的 분화가 일어나서 산업구조내(intra-industry)의 무역이 일어난다면 이때의 무역상품은 동질적이 되어 代替의 기능을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관계에서도 상호경쟁적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의 水直的 分化가 이루어져서 양측의 무역이 산업구조간(inter-industry)의 무역이 일어난다면 이때의 무역상품은 이질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인 성질을 갖게 된다.

그런데 남북한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무역이 없으므로 두 경제의 상호 상품 교역구조를 日本과의 교역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리하여 본다. 日本과의 무역량이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는 두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며 북한으로서는 소련, 중공 다음으로 세번째 큰 상대국이다.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분석은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가정한다.



분석하기 위한 각 경제의 개별상품의 총수출입 총액 통계자료는 관세협회사회의 품목분류방법(CCCN)에 따른 中分類(2자리 숫자) 품목의 자료이다. 그리고 북한 수출입 통계는 일본 대장성 관세국에서 발행한 「日本貿易統計」와 한국의 수출입 통계는 한국관세협회에서 발행한 「貿易統計年報」를 이용했다.

잠재적 무역구조를 알기 위하여 各側의 개별상품의 수출입총액을 이용한 輸出入 比率指數로서 分析한 결과를 보기로 한다.⁸⁾

$$EM' = X'/M' \times 100 \quad X' : 1970 \text{ 년과 } 1980 \text{ 년 수출총액}$$

$$M' : 1970 \text{ 년과 } 1980 \text{ 년 수입총액}$$

EM 指數의 크기로 보아 4 단계(1,000 이상, 1,000~200, 200~50, 50 이하)로 구분한 다음 특정상품에 대한 양국의 무역구조를 분석한다. 즉 양국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양쪽 같이 높은 EM 指數를 갖는 경우 그 상품에 있어서는 상호경쟁적 관계에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한쪽은 높고 다른 쪽은 낮은 지수를 갖는 경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남북한의 무역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表 9>와 같다.

<表 9>를 보면 현재경쟁적인 상품은 거의가 농수산물로서 이것은 북한이 수출에 있어서 주로 一次產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보완적 관계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주로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도 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제품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의 수입실적을 감안하여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섬유류(61), 여행용구(42), 메리야스(60) 이다.

다만 이러한 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통계자료가 1979~80년의 자료라는 점과 日本을 통한 무역구조이므로, 남북한 경제가 직접무역을 하는 경우 반드시 上記의 결과와 一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사이 구조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日本과의 관계를 통한 것이 두 경제구조를 직접 반영한다고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한국이 수송기계류와 같은 자본재 수출이 日本 以外 지역에 크게 신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영못하며 북한의 비철금속 수출도 큰데 표에서 이런 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表 9>의 해석에는 주

8) 臺灣—中共間의 轉口貿易의 구조를 이 방법으로 분석한 예가 있다. 張榮堯, "臺灣與大陸經由香港之轉口貿易", 大陸經濟, 第1號, 1986.

남한과 북한의 잠재적 무역구조

〈表 9〉

무역형태	상품항목 (CCCN 분류번호)	남한의 EM 지수	북한의 EM 지수
상호 경쟁적으로 나타나는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류,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조제품(16) 2.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3) 3.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7) 4. 산 동물(1) 5. 견 및 견직물(50) 6. 농산물, 조란, 천연물 및 따로 계기한 것 이외의 식용동물성 생산품(4) 7.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파쇄, 각종의 종자와 파쇄, 공업용 및 의료용의 식물, 질과 사료용 식물(12) 8. 식물성의 편조물용, 조각용 및 세공용의 재료와 따로 계기한 것 이외의 직물성 생산품(14) 	<p>10, 715.02</p> <p>5, 532.88</p> <p>5, 177.71</p> <p>2, 882.83</p> <p>2, 337.95</p> <p>1, 712.15</p> <p>1, 660.00</p> <p>1, 453.43</p>	<p>208, 847.87</p> <p>67, 389.01</p> <p>ERR*</p> <p>1, 690.99</p> <p>205, 107.16</p> <p>20, 763.97</p> <p>1, 319.43</p> <p>ERR</p>
경쟁이 있거나 관련된 산업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소, 파쇄, 기타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20) 2. 염색용 또는 유연용의 식물성 원재료, 락, 견, 수지 및 기타의 액체와 엑스(13) 3. 아마와 라이 및 이들의 제품(54) 4. 금속광, 광채 및 회(26) 5.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9) 6. 도피 및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43) 	<p>10, 945.64</p> <p>1, 379.04</p> <p>641.92</p> <p>539.78</p> <p>415.46</p> <p>369.56</p>	<p>494.36</p> <p>764.48</p> <p>ERR</p> <p>3, 149.04</p> <p>1, 195.68</p> <p>16, 923.44</p>
상호 경쟁적으로 보편적으로 유통될 것으로	<p>무역방향</p> <p>상 품 항 목 (CCCN 분류번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초(24) 2. 주화(72) 3. 육류와 식용철육(2) 	<p>ERR</p> <p>ERR</p> <p>ERR</p>	<p>ERR</p> <p>ERR</p> <p>ERR</p>

의를 하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던 상호무역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쌍방의 잠재무역 형태를 전반적으로 보기 위하여 EM指數의 수치를 큰 수치부터 작은 수치 순서로 순서를 정하여 석차를 매긴 후 그 서열의 상관계수를 보면 0.3890으로서 다소 상호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⁹⁾ 이 현상은 大分類에 의하여 본 것과 다소 대조적인 현상으로서 좀 더 세분화할 때 대일 무역구조란 것을 고려하면 다소 납득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규모면에서나 수출품목의 다양화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南北韓의 經濟協力

북한은 自力更生原則을 고수하여 왔다고 하나 실상은 1960년대까지 소련·중공그리고 東歐 공산제국으로부터 원조와 차관으로 경제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제 1차 7개년 계획(1961~70)부터 시작하여 경제계획의 차질로 심각성이 나타나고 계속하여 무역수지 적자에 의하여 1970년대 이후에는 서방으로부터 경제협력 도입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도 차관에 의한 협력이었지 西方資本의 직접투자나 기술협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1970년에 최초로 \$300萬 차관을 도입한 후 1972년 이후에는 오히려 서방으로부터의 차관총액이 공산권으로부터의 것 보다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6개년 계획(1971~76) 기간 중에는 차관총액의 50% 이상이 서방으로부터 도입되었다. 이 현상이 6개년 계획기간 중 서방으로부터 차관도입에 의해 계획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무리한 추진과 그리고 對西方 輸入規模擴大도 동시에 일어나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다른 中長期 계획기간과 비교하여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1975년 외채지불 연

9) 계수가 +1인 경우는 최고 상호 경쟁적이며 계수가 -1인 경우 최고 상호 보완적이다.

<表 10>

北韓의 受援 및 借款導入 實情

(단위 : 萬弗)

기간 구분과 원조 공여액	경제 협력의 구분			유상원조 중 상환 면제
	합 계	무상원조	차 관	
1949년 이전	5,300		5,300	
(소련)	5,300		5,300	
1950~60년	165,336	127,844	37,492	34,042
(소련)	71,325	51,475	19,850	21,650
(중공)	50,850	33,600	17,250	12,000
(동구권)	43,161	42,769	392	392
1961~69년				
(소련)	19,668		19,668	
(중공)	10,500		10,500	
(동독)	3,500		3,500	
1970년	3			
(OECD)	300		300	
(소련)	8,700		8,700	
1971년				
(OECD)	1,700		1,700	
(소련)	25,000		25,000	
1972년				
(OECD)	20,400		20,400	
(소련)	15,000		15,000	
1973년				
(OECD)	37,500		37,500	
(소련)	10,900		10,900	
1974~75년				
(OECD)	64,300		64,300	
(소련)	30,600		30,600	
1976년				
(소련)	400		400	
(중공)	160		160	
1978~84년				
(소련)	29,615		29,615	
(중공)	25,870		25,870	

자료 : 「북한 경제 통계집」, 국토 통일원, 1986.

기사대로 북한은 서방으로 부터 신규차관 도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表 10 참조> 그래서 1978년 부터는 자력갱생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다사中蘇의 불충분한 경제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타개를 위하여 북한은 최근 對蘇傾斜政策과 함께 1984년 9월 8日 外國人의 合作投資를 허용하는 26個條項의 「合營法」을 제정하여 대외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合營法이 제정된 1984년의 북한경제는 제 2차 7개년계획의 최종해(1978~84)였는데 당시 공업 및 농업부문의 실적 발표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같이 절박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합영법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中共의 개방화에 따른 中外合資經營企業法(1979.8)이 합영법 제정에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1984년 1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 대상으로 사회주의제국과 제 3세계제국 외에 우호적인 자본주의 서구제국을 거론하여 북한사회의 폐쇄상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극복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 후 당간부 및 정치관료 그리고 각 지방책임자들이 중공 대외개방정책의 대표적인 예인 深圳經濟特區를 방문하는 등 준비단계를 거쳐 1984년 9월 합영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합영법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적인 완비를 위해 합영법 부속법령에 해당하는 「합영법 시행 세칙」, 「합영회사 소득세법과 세칙」, 「외국인 소득세법과 세칙」을 1985년 3월~5월 사이 제정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도입을 겨냥한 법적 장치를 확실히 했다. 합영법은 한마디로 서방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유치, 북한지역내에서 合作會社의 경영활동을 보호, 허락하며, 일정 소득세를 제외한 합작기업 소득의 본국 과실송금을 인정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中共의 「中外法」과 비교하여 보면 소득세율, 연체료, 송금시 부가세 등 각종 규정에서 북한 것이 외국인에 유리하게 설정함으로써 법적인 면에서 투자환경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율로서 법인

소득세율을 순소득의 25%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중공의 33%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다. 한편 외국인 소득세(개인 소득세)의 경우에는 5~30%로서 중공의 5~45%의 누진세율 적용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 소득세 감면 규정에 있어서도 북한은 기업경영 개시후 3년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면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순 소득이 적을 때는 청원에 따라 면제하거나 소득세를 덜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공은 이윤을 얻기 시작한 년도부터 기관의 인가를 거쳐 1~2년간은 면제, 3~5년간은 반액감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소득세 미납에 따른 연체료 역시 중공은 日當 연체액의 0.5%인데 북한은 0.3%로 정함으로써 투자자의 불이익 감소를 배려하고 있다. 소득의 해외송금에 따른 세금추징면에서도 중공이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음으로서 해외송금에 따른 불이익 또한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利害當事者의 권익조정이라는 법의 기능면에서 보면 중공은 이해대립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 당사자의 이해를 법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合營當事者의 친선과 협력을 전제로 한 합의에 의한 처리를 내세워 필요 법조문을 간략화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분쟁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또한 기업의 납세와 관련한 과세표준세부기준이나 자산액 및 고정자산 감가상각의 평가등 세법 시행령으로서 중요한 이해관계 조항을 누락시킴으로서 자의적인 세법운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¹⁰⁾

한편, 합작대상업종의 희망분야는 중공의 경우 반드시 중공이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 및 설비에 한하여 고의로 기술과 설비를 사기하여 손실을 가져올 때는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공업·건설·운수·과학기술 및 관광업 등 諸分野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10) 北韓의 合營企業關係法令集, 國土統一院, 1986.

조항만큼은 중공보다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이들 5개부문의 합영 가능성을 살펴보면, 먼저 공업부문에 있어서 중화학공업은 북한시장이 협소하여 수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경공업 부문은 중공업우선 정책과 소비수요의 미흡으로 정책노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윤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컴퓨터 및 전자부문 등 첨단산업부문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가장 필요한 합작투자 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경영인 확보 및 기술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분간 어려운 형편이고, 건설 및 운수부문은 자본회전속도가 낮으며 아울러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합작사업 유치 실태를 보면 총 318건의 상담이 진행됐거나 되고 있으며, 이중 28건은 공산권과 이루어진 교섭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합의에 이른 것은 38건에 불과하며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불과 몇건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38건의 실적에서 대부분인 28건이 日本과의 교섭이었으며 대체로 조총련과 이루어진 상담들이었다. 나머지 10건중 4건은 서방세계와 이루어진 것이며 6건은 소련과 불가리아로서 각각 3건에 이른다.

지금까지 합작회사로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낙원백화점, 양각도호텔, 창광커피숍, 大東자동차 수리공장, 金萬有병원 등이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업종은 확인할 수 없지만 조선국제합영총회사(120萬달러 合作線, 日本, 지분률 50:50)와 모란봉 합영회사(616萬달러, 日本, 지분률 50:50)이 있다. 그리고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추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첫째, 1986년 8월경 조총련 상공인과 상담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도된 운산금광개발 주식회사이다. 둘째는 85년 9월 日本의 남해전철과 사이에 오고간 담배공장의 合作推進이다. 이외에도 일본과 남포금속공장, 이탈리아 기업과 광물수출에 관한 합작투자, 프랑스와 인공위성 중계소, 술—음료수 공장 서독과 강철산업, 스웨덴과 가구산업, 홍콩과 합홍타이어공장 등 제분야

에서 合作投資의 상당이 進行되었다.¹¹⁾

지금까지 北韓의 合作投資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北韓 투자의 우선적 대상은 국내의 자본동원이 가급적 낮은 영역이라는 점이다.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그 지분률이 최대 50%로서 소유와 경영에 있어 필요한 자본의 최소한에 머무르고 있다. 투자가 계약당사자 끼리의 합의에 든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 두고 규정된 조항이다. 둘째로는 호텔, 백화점, 커피숍 같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특수 관광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세번째는 자동차수리, 타이어, 가구, 담배, 병원, 술 등과 같이 재화나 서비스와 소비재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점은 北韓이 그동안 중공업우선정책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극심한 불균형상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네번째 특징은 合營法의 目的이 先進技術의 도입에 있으나 실제 도입된 분야는 첨단과학이나 선진기술도입이 아닌 분야가 일반적이다. 또 기술도입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리 높지 않은 기술수준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北韓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60년대 이후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자본도입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원조와 차관이 해외자본도입에 큰 비중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7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직접투자 또한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총액은 크지 않지만 이 외국인 직접투자(주로 일본과 미국)는 단순한 자본의 이전이라기 보다는 이것을 통한 기술·경영능력 및 시장정보 등을 동시에 이전내지 공급시킴으로서 한국경제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세계무대에서 한국경제규모도 커졌으며 또한 수출지향적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資源確保, 人力輸出, 海外市場確保 등을 위하여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70년대 후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11) 內外通信, 1985. 9.27;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rterly Economic Review of China, North Korea, 2nd & 3rd & 4th Quarter, 1985 참조.

1986년말 현재까지 총 6억불 이상 직접투자를 하였는데 투자분야를 보면 천연자원 확보를 위한 광업, 임업, 수산업 분야에 약 50%로 가장 크며 다음이 무역, 운수업,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최근 80년대 들어서는 첨단기술 확보와 수입규제의 장벽을 극복하고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가전·전자 분야의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해외직접투자까지 하는 현시점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게된다. 남북한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경제회담이 지난 84년 11월 5일 부터 85년 11월 10일까지 5차에 걸쳐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안 모색에 의견합의를 못보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 사실 남북한 경제교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정치적 문제로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다만 여기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겠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남북한의 경제교류 및 협력은 物資交流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 및 기술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본과 기술협력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첫째가 남북한의 물자교류에 따른 신용 및 차관이 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西獨이 東獨에 주는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으로서 스윙 신용제도(swing credit)인데, 이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경제협력은 물자교류가 상당기간 추진된 이후에야 이용가능한 제도가 아닌가 한다. 그 이전에 우리는 제국을 통한 간접무역 또는 직접무역의 경우에도 구상무역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형태가 진정한 자본 및 기술이전을 뜻하는 경제협력 형태로 직접투자와 합작투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협력은 제조업 분야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자원 공동개발, 공동 어로작업, 관광시설 개발, 호텔건립 등 여러 분야에서 합작이 가능할 것이다.

V. 經濟交流 展開 戰略

1. 分斷國의 經濟交流 事例

地球上에서 同一民族으로 2차대전 이후 분단된 지역은 南北韓, 台灣과 中國大陸, 그리고 東西獨을 들 수 있다. 분단의 역사적 및 정치적 배경과 이유를 달리하지만, 분단국들은 근본적으로 정치 경제 체제를 달리 하며 대립된 상태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各各 個別的으로 對立狀態에 있는 當事國間의 經濟交流 및 協力の 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달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東西經濟交流는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常例인데 특히 과거 同一國家이던 것이 政治的 理念을 달리하며 다른 경제사회 體制 아래서분단된 상태로 對立的 位置에 있는 이들 국가들의 經濟交流 및 協力이란 것은 말할나위 없이 그 지역의 특수성, 특히 정치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上記 세 地域들 중에서 東西獨의 經濟交流가 가장 發展한 상태에 있으며, 이것은 長時間에 걸친 關係增進의 結果이다. 현재는 무역의 비중도 상당하고 상호 互惠의인 信用提供(주로 西獨이 제공)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東西獨의 交易은 하나의 特殊한 형태(innerdeutscher Handel; intra-German trade)로서 이것의 법적 근거는 1951년 9월의 백령협정(Berliner Abkommen)과 이 협정에 대한 1960년의 수정안이 현재까지 유효한데, 이것을 1972년 基本條約(Grundlagenvertrag)에서 재확인 하였다.

이러한 법적근거 아래 東獨은 西獨과의 交易關係를 外國貿易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西獨은 立場을 달리하고 있다. 즉 東獨과의 去來는 國內去來와 같이 취급하여 對外去來法(Aussenwirtschaftsgesetz)에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이유는 東獨은 獨逸의 一部이지 外國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對內去來와 동일시 한다 하더라도 경제

적으로는 제도상의 상이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例로서 쌍방간의 去來清算問題, 會計單位問題, 交易當事者問題 등이 있으며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다.

이러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東西獨間的 交易은 정치적 위기였던 백립障壁事件 때에 저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여 1950년에 8억 10백만 VE(會計單位, verrechnungseinheiten)이던 것이 1960년에 20억 38백만 VE, 1980년에 117억 30백만 VE, 그리고 1985년에는 167억 43백만 VE로 急成長하고 있다. 1985년의 교역비중을 보면 西獨에서는 東西獨 교역이 전무역량의 1.6%이며 東歐와의 관계에서 소련 다음으로 東獨이 제 2의 큰 교역상대국이고, 전세계적으로 보아서도 14번째에 해당한다. 그런데 東獨則에서 보면 전무역량의 8%에 해당하며 소련 다음으로 제 2의 교역국이 西獨이며, 西方과의 교역에서는 제일 큰 상대국이 바로 서독이다. 이러한 東西獨間的 交易量은 戰前과 비교하면 절대치로는 2.5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936년도와 비교하여 40% 정도에 불과하다.

兩獨 사이의 경제교류에서는 무역량의 증가 뿐만 아니라 資本去來도 크게 증가하여 1983년도를 기준으로 보아 東獨의 外債는 300억 DM이 되는데 이중 28%에 해당하는 85억 DM은 東歐(주로 소련)에 진 債務이며 이의 大部分은 "스빙" 信用制度에 의한 초과 引出 및 信用去來, 資本導入에 의한 西獨에 대한 채무이다.

정치적으로 분단된 兩獨이 경제적으로는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는 各者의 정치적 및 경제적 利害關係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西獨은 정치적 이해가 더욱 크며 東獨은 정치적 목적보다 경제적 이해가 더욱 크다. 例를 들면 東獨은 서방과의 교역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서독과의 교역으로 서독이 동독의 큰 상품수출시장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서독으로 부터 資本財를 주로 공급받으며 이로서 서독의 높은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한때는 東獨이 西獨으로 부터 이러한 依存性을 탈피하려고 自立策

(Störfreimachung)을 강구하였지만 代替財 購買과 費用면에서 큰 손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속 추진하지 못하였다.¹²⁾

東西獨의 長時間에 걸친 밀접한 경제적 유대관계 증진은 同一民族에다 同一言語를 사용하며 전통적인 어떠한 유대관계의 결과라고들 하지만, 같은 조건에 있는 台灣과 中共 특히 南北韓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교류란 全無한 상태이다.

最近 들어서 中共과 台灣間에는 台灣側의 禁止에 의하여 大陸과 公式的인 直接貿易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香港과 같은 제 3국(또는 지역)을 經由하여 진행되는 轉口貿易은 크게 增加하고 있다. 1979년에 雙方의 총거래액이 3억 85백만 香港달러이던 것이 1984년에는 43억 17백만 香港달러로 증가하였고, 1985년에는 무려 86억 37백만 香港달러에 이르고 있다.¹³⁾

1949년 國民黨이 大陸을 떠난 후 台灣과 中共은 정치적으로 현재까지 줄곧 對立해 왔고 이러한 정치적 對立이 雙方의 貿易에 直接의 阻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中共은 文化革命 이후 鄧小平의 등장에 의하여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함에 때를 같이하여 1976년에 台灣同脫에 告하는 글을 통해서 通航, 通郵, 通商이란 「三通」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台灣과의 交역을 內國問題視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980년에는 特혜조치를 발표하여 主要都市에 대만 상품의 판매를 공식적으로 許容하였다.

이에 對하여 台灣은 國共不妥協, 不協商, 不接觸이란 「三不政策」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兩地域間의 직접 경제교류를 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 때문에 中共과의 간접교역을 묵인하고 있다. 즉 제 3국을 경유

12) Gert Leptin,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東西研究), vol. XIV, no. 1, 東西問題研究院, 延世大學校, 1985, pp. 1~12.

Karl-Heinz Gross, "Der innerdeutsche Handel aus internationaler Sicht," *Deutschland Archiv* 10, 196., pp. 1075~1084.

13) 張榮豐, "臺灣與大陸經由香港之轉口貿易", *大陸經濟*, 第一號, 1986.

하는 통로는 무조건 제한하지 않는다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정책을 최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중공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간접무역이 급증하고 있다.

南北韓은 현재 台灣·中共과 같은 間接交易마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東西間에는 이념을 초월한 경제교류 및 협력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신장되어 가는 마당에 南北韓도 이러한 여건변화 아래 정치적으로는 不妥協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경제적 교류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와같은 비정치적인 경제교류는 궁극적으로 경제통합 그리고 장치적 통일이란 목표를 위하여 長期間의 分斷과 無交流 狀態에서 발생하는 동족간의 이질성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2. 經濟會談 推進戰略

南北韓經濟는 구조, 정책, 그리고 발전수준등에서의, 차이가 많아 다른 市場經濟體制를 가진 국가처럼 쉽게 협조와 교류를 할 수 없다. 經濟體制의 相克性은 짧은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相補性에 있어서도 우리가 北韓經濟를 도울 수 있는 영역은 많아도 北韓이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北韓 經濟協力을 위하여 經濟會談을 추진하는 이유는 政治的 考慮 때문이다.

北韓은 외국이 아니다. 北韓同脫는 더구나 외국인일 수가 없다. 우리는 北韓社會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우리 社會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北韓同胞를 “우리 民族社會構成員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民族社會發展과 같은 次元에서 北韓社會發展을 생각하고, 南韓에서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福祉向上과 같은 軌에서 北韓住民의 복지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에 대한 基本認識은 1988년 7월 7일에 발표된 盧泰愚大統領의 統一問題에 대한 特別宣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北韓社會의 낙후된 경제에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또한 統一以前이

라도 北韓住民이 보다는 물리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同胞愛에 기초한 政治的 고려가 우리가 南北韓經濟를 다루어 나가는 基本指針이다. 그런 뜻에서 經濟的 問題意識을 넘는 接近이 필요해진다.

南北韓經濟交流는 그렇다고 一方的 援助형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적어도 두가지 점은 명백히 하고 진행시켜야 한다.

첫째는 北韓의 好戰性을 고려해야 한다. 北韓은 아직도 “南半部解放”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善意的 도움을 戰爭 목적에 惡用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우리의 對北經濟交流는 北韓이 戰爭에 악용할 수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北韓이 최소한 우리에게 安保威脅을 가하지 않는 상태가 확인될 때 본격적인 交流와 協調를 시작하여야 한다. 둘째로 政治적인 배려를 한다 하더라도 經濟交流는 어디까지나 經濟交流이므로 최소한의 희생과 최대한의 실질적 이득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成長을 희생할정도로 一方的 援助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經濟的 利得을 도의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經濟의에 政治的 고려를 해야하는 관계이므로 일반적인 交易와 協助와는 달리 다소의 희생과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 뿐이다.

南北韓간의 經濟會談은 韓國動亂以前의 交易協商부터 1985년의 판문점 회담까지 여러차례 있어왔다. 動亂以前에는 逆電문제등 구체적, 실무적 협의였고 1985년의 회담은 포괄적인 회담이었다. 南北韓當局者간의 회담은 여러갈래로 여러차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實質的인 討議가 이루어졌던 회담은 역시 經濟會談이었다.

韓國의 統一政策의 기본은 南北韓平和裝置마련, 交流를 통한 신뢰회복, 그리고 順次로 南北社會를 社會, 文化, 經濟, 政治共同體로 묶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統一政策에 비추어 볼 때 經濟會談은 南北韓 相互信賴회복의 契機를 마련해준다는 뜻도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 南北韓 經濟共同體를 만들어가는 出發도 된다는 점에서 그 意義가 크다.

會談展開戰略 수립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經濟會談은 전반적인 對北韓政策의 맥락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赤十字會談, 政治會談등과 관련하여 진행속도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國土統一院 등의 統合政策調查機關과의 협의속에서 經濟會談戰略을 짜야한다.

둘째, 政治 및 經濟界, 學界專門家를 망라한 會談對策委員會를 구성하여 經濟的 諸考慮事項을 검토해가면서 종합적으로 戰略을 짜야한다. 그리고 代表團에도 반드시 經濟專門家가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會談은 實務的으로 추진해야 한다. 政治的 고려는 戰略수립때의 고려사항이지 會談內容에 나타나서는 안된다. 순수한 非政治的 會談이 되어야 成事可能性이 높다.

네째, 經濟會談을 선전용으로 써서는 안된다. 經濟를 政治와 分離한다는 방침이 統一政策의 기본임을 인식하여 會談에서는 經濟的인 內容만 論議되어야 하고 經濟的 필요성만으로 交流를 정당화해야 한다.

끝으로 經濟會談에서는 北韓當局을 모욕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北韓當局의 “體面”을 손상하는 식의 發言이나 提議는 會談을 깨는 원인이 된다.

南北韓經濟協力과 交流는 經濟政策이면서 동시에 政治政策이어야 하며 나아가서 포괄적인 統一政策의 一環이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國土統一院, “北韓의 社會變化徵候動向”, 1985. 9.
2. ———, “第2次 7個年計劃總和 및 第3次 7個年計劃分析”, 1987. 4.
3. ———, “北韓의 合營企業關係法令集”, 1986.
4. ———, 北韓經濟統計集, 1986.
5.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7.
6. 延河清,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韓國開發研究院, 1986.
7. 張榮豐, “臺灣與大陸經由香港之轉口貿易”, 大陸經濟, 第1號, 1986.
8. H. Hunter, “Optimal tautness in Developmental Planning”,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uly 1961. 9(2)
9. Lawrence B. Krause, “Major Policy Issues for Small open Economy”,

國際經濟研究院(現：產業研究院) Seminar Series ss-77-5, aug. 1977.

10. Gert Leptin,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東西研究, 14 卷 1 號, 東西問題研究院, 延世大學校, 1985.
11. Karl-Heinz Gross, "Der innerdeutsche Handel aus intranationaler Sicht", *Deutschland Archiv* 10, 1986.